

용담댐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대책 촉구

건의서 (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1995. 5. 11.

제출자 : 문교사회 위원장

1. 주 문

-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 건의함.

가. 용수배분의 재조정

나. 수리권의 보장

다.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용역결과 건의사항 적극 수용 촉구

2. 제 안 이 유

- 용담댐건설에 따라 하류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하여
- 댐 건설 관련부처에 이의 개선방안 모색을 건의코자 함.

### 3. 건 의 처

- 국회 (3) : 국회의장, 건설교통 위원장, 환경노동 위원장
- 정부 (5) :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 환경처 장관,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 정당 (6) : 민주자유당 대표 최고위원, 민주당 대표, 자유민주연합 총재, 민주자유당 대전광역시지부 위원장, 민주당 대전광역시지부 위원장,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지부 위원장.
- 지역국회의원 (5) : 남재두, 송천영, 강창희, 이재환, 김원웅.
- 집 행 부 : 대전광역시장

##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대책 촉구

### 건의서 (안)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지역의 생·공업용수등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8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그간 금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 대전, 충청권등 댐하류 지역에서는 용담댐 건설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용담댐의 건설로 지금까지 흐르던 금강 물줄기의 3/4를 전주권으로 돌려놓는다는 외형상의 결과만 보아도 우려가 아닌 현실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용담댐건설계획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관련 지방의회, 시민 및 환경단체, 기타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 등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개선할 의지가 없이 오로지 사업추진의 합리성만을 강조하며 댐 공사를 강행한다는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권 보존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관철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권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 하류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건의하오니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400만 인구의 생명수이며 금강수계 400km 하천 수질 보호와 직결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건의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수용되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만부득히 충청권 피해 극소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 1. 용수배분의 재조정

현행 한국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건설계획에 따르면 금강 상류에서 대청호로 흐르던 물중 그 4분의 3에 달하는 135만 $\text{m}^3$ /1일 의 물을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지역의 생·공업 용수로 공급하고 나머지 4분의 1인 약 43만 $\text{m}^3$ /1일 만을 하류지역의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간 대청호로 유입되던 유입량의 23%에 달하는 연간 약 4억 4천만 $\text{m}^3$ 의 수량을 감소케 할뿐 아니라 유입수량 감소로 인한 22%정도의 부영양화 현상 증가, 대청댐 하류 400km에 달하는 금강수계의 오염 및 지하수 고갈, 용담댐 상·하류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부족사태, 중부권 중핵도시로 급성장하는 대전의 인구팽창에 따른 용수부족문제, 기타 아산·인주만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청호의 물 공급 능력 부족등의 문제점이 감춰진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을 젓줄로 하여 살고 있는 대청호를 생명수로 하고 있는 충청권의 심각한 실상을 외면한채 오로지 전주권 인구증가에 따른 생·공업용수 공급이라는 대의명분만을 고집한채 댐건설 사업에만 연연하는 수자원공사의 저의는 충청권에서 생명수로 여기고 있는 100만  $\text{m}^3/\text{1日}$ 의 깨끗한 물을 수력발전용으로 사용하여 연간 약 50억원에 달하는 발전수익을 얻고져 함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더이상 강건너 불보 듯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우려는 댐 건설계획의 용수활용 측면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예를 들어보면, 2011년까지 전주권 인구가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는 약 30만  $\text{m}^3/\text{1日}$ 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댐 완공 시점부터 135만  $\text{m}^3/\text{1日}$ 의 물을 전주권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전주권에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약 30만  $\text{m}^3/\text{1日}$ 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0만  $\text{m}^3/\text{1日}$  가량의 물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발전용수로 사용한 후 만경강 (수계 40km)을 거쳐 서해바다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전주권 용수공급 목적에 허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수계 400km를 거쳐 수천년동안 도도히 흐르던 금강의 물줄기를 막아 금강을 죽은 강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전주권 생·공업용수 공급목적이 용담댐 건설의 최종 목적이라면서 충청권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경청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태의연한 수자원 공사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임을 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주권 인구의 재산정과 댐 하류로 방류하는 제2 단계 발전시설의 확대, 전주권 인구 증가율에 따라 필요 용수량을 공급하는 다단계 급수방법등을 통하여 용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금강수계 400km의 하천도 살리고 충청권의 생명수인

대청호도 살리면서 전주권 생·공업 용수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용수배분계획으로 전면 재조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2. 수리권 보장

현대사회에 있어서 수자원의 확보문제는 생존권과도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 이러한 물 확보문제는 첨예한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항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주체에서는 막연한 물 배분 원칙만 고수하면서 용담댐건설로 대청호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댐 하류 금강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다면 수자원공사가 설마 이를 외면하겠는가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견지한채 법적근거 미흡등을 사유로 극심한 갈수기 또는 홍수시 수리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마련을 기피한채 댐 건설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극심한 갈수기시 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댐 완공 이전에 마련하여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 3.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용역결과 건의사항의 적극 수용

용담댐 건설에 따라 피해를 우려하는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론과 건의등에 따라 댐 건설 주체인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련 자치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담댐 건설에 따라 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용역 발주한바 있으며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까지 일부 개최(영동지역에서는 주민의 반발로 무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주체이며 용역 발주처인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연구용역결과를 댐 건설의 합리화를 위한 일부단계 정도로만 취급할뿐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상 나타난 제반 환경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용역이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실시된 용역인 만큼 본 결과보고서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1995. 5.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 일동